

## 방사성폐기물관련 신문의 위험보도내용 분석

### Study on the Risk Communication of Radioactive Waste Material in Newspaper

김수근·안소현·김종순  
방사선보건연구원

#### 요 약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관한 신문의 관심은 매우 컸으며, 3개월동안에 480건의 기사를 8개 신문에서 실었다. 사설도 38건이었으나 상황과 사안에 따라 모든 신문이 정형화된 내용과 비판을 하였다.

기사는 대부분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존한 하거나, 시위소식 등을 전하는 단순사안이었고, 심층보도는 이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논리와 여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지 못하였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는 68건의 심층 보도 가운데 17건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도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해설이나 분석기사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신문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화의 장을 이끌어 내거나 제공하지 못하였고,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많은 기사 보도의 남발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영향만 남았다고 판단된다.

#### 서 론

위험에 대한 선택과 관리문제를 두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선택이든 위험을 내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최대의 위험은 합리성을 포기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정책집행주체와 힘겨루기로 나타나 갈등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학적으로 위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문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서 알려주는 것 외에도 관련된 문제점 분석과 안전관리 등의 대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입장이 다른 당사자들 간에 막힌 대화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위험과 안전에 대하여 보도한 신문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문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위험과 안전에 대하여 얼마만큼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다음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하여 신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과 안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연구 자료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월간으로 제공하는 '원자력보도동향' 7월호(통권 제133호)부터 9월호(통권 제135호)까지에 수록된 조선, 중앙, 동아, 한국, 한겨레, 경향, 대한매일, 문화일보 등 8개 신문에 보도된 기사로 하였다.

### 2)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우선 신문의 보도 량과 보도형태를 살펴보고 신문의 사설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문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문의 심층보도내용을 통해서 신문에서 다룬 방사성폐기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1) 신문의 보도형태와 량

신문에 보도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관련 기사는 다음 [표 1]과 같이 7, 8, 9월에 각각 204건, 141건, 135건 으로 3개월간의 전체 기사건수는 480개이었다.

표 1. 7-9월의 월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관련기사

월별	방폐물관련기사(A)	원자력 관련 기사(B)	A/B X 100
7월	204	219	93.3 %
8월	141	158	89.2 %
9월	135	156	86.5 %
합계	480	533	90.1 %

보도형태는 단순사안을 보도한 기사가 283건(5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심층보도 68 건 (14.2%), 컬럼과 논단이 59건(12.3%), 사설이 38건(7.9%), 독자투고가 32건(6.7%) 이었다(표 2).

표 2. 보도형태

보도형태류	7월	8월	9월	계(%)
단순보도	115	97	71	283 (59.0)
심층보도	30	12	26	68 (14.2)
사 설	20	10	8	38 ( 7.9)
컬럼/논단	30	10	19	59 (12.3)
독자투고	9	12	11	32 ( 6.7)

##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신문의 관점

신문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월 동안 8개 신문의 사설을 검토하였다.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사설은 총 38건이었으며, 부안군이 단독으로 유치 신청한 14일 일후인 16, 17일에 6개 신문에서 유치신청을 환영하면서 그 의의와 부안군의 결단을 높이 사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된 사실을 근거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확정발표에 임박하여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과격한 시위가 있고 나서 24, 25일에 7개 신문에서 과격한 시위로 인하여 방폐장 건설이 또 다시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여론수렴 미비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을 설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실고 있다. 현금보상 문제가 제기된 이후 29, 30일에는 7개 신문에서 현금보상의 문제점을 형평성, 현실성, 명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방안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표 3).

표 3. 7월의 사설제목(20건)

신문	16,17일	24, 25일	28, 29일
조선	扶安郡의 결단을 평가한다.	부안 放廢場, 나라 전체의 문제다	現金 뿌리기는 위도를 망칠 뿐이다
중앙	핵별 보게 된 핵폐기물 처리장	代案없는 과격시위 안된다	핵폐기장 현금 보상 문제 많다
동아	原電 수거물 '20년 방황' 이제 그만	제2의 '안면도 사태' 피하자	위도 주민 현금보상 최선인가
한국	-	약속 이행으로 위도에 보상하라	국책사업 어떻게 하려고
경향	부안 핵폐기장 성공하려면	위도 핵폐기장 이제부터	'위도' 현금보상 재고해야
한겨레	핵폐기장,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핵폐기장, '밀어붙이기'는 안된다	-
대한일	-	부안 핵폐기장 안면도 재판 안돼	'위도 현금보상' 신중해야
문화	부안군민의 결단	-	위도 현금보상의 문제점

8월에는 6개 신문에서 10건의 사설에서 방폐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주민투표를 통하여 방폐장 유치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식의 문제점을 3개 신문에서 지적하면서 주민설득을 강조하였고, 1개 신문에서는 주민의 자유토론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투표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고속도로 접거와 등교거부 등 지역주민의 반대시위가 다시 과격해 지면서 4개 신문에서 과격시위의 문제점과 주민의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주민설득을 촉구하였다(표 4).

9월에는 3개 신문에서 8건의 사설로 계속되는 등교거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군수 폭행사태까지 몰고 온 정부의 무능과 일관성 업무는 국책사업추진을 비판하고 있다(표 5).

## 3) 위험과 안전에 대한 보도내용

신문에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위험과 안전에 대하여 다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 보도한 기사들을 검토하였다.

7월에는 8개 신문 모두에서 30건의 관련 심층보도가 있었으며, 방폐장의 위험과 안전에 대하여 다룬 기사는 12건이었고, 8월에는 12건의 심층보도 중 2건의 기사에서 9월에는 26건의 심층보도

중 3건의 기사에서 방폐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표 4. 8월의 사설(10건)

일자	제목	신문
01일	이러고도 여당이라 할 수 있나	중 앙
04일	放廢場 주민투표, 혼란만 부른다	조 선
	부안군 주민투표 문제 있다	동 아
	위도, 주민투표는 해결책 아니다	한겨레
	위도 주민투표 해 볼만 하다	대한매일
18일	고속도로 점거시위까지 해서야	동 아
26일	扶安의 혼란과 정부의 無策	조 선
	부안 주민 과격시위 자제해야	중 앙
	등교 거부까지 시켜서야	동 아
	등교거부, 빛나간 시위문화	경 향

표 5. 9월의 사설(8건)

일자	제목	신문
03일	투쟁수단 될 수 없는 등교거부	중 앙
04일	핵폐기장 반대 학생 불모 안돼	대한매일
10일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가	중 앙
	부안 사태, 폭력은 안돼	대한매일
	김군수가 주저앉아 런치당할 때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은 어디 있었나	조 선
15일	국정난제, 대통령이 앞장서 풀어야	중 앙
17일	대통령이 앞장서 나라 분위기 바꿔야	조 선
22일	국책사업 눈치보기 끝내라	대한매일

심층보도에서 다른 위험과 안전에 관한 내용은 정책의 신뢰와 안전에 관한 기사가 6건, 경제적 손실에 대한 기사 2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사 2건, 건강피해에 대한 기사 4건, 절대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8건, 과학기술적으로 안전의 입증과 관련된 기사가 4건, 위험에 대한 수용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에 대한 이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8건 등이었다(표 6).

표 6. 심층보도에 나타난 방사성폐기물의 위험과 안전성

내용	기사건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안전	6건
경제적 손실	2건
경제적 도움	2건
건강상의 피해	4건
절대적 안전보장	8건
과학기술적으로 안전입증	4건
위험에 대한 해결(수용)	8건

## 결 론

17년 동안이나 표류하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국책사업이거 해당지역주민

과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이므로 모든 신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3개월동안 480건의 많은 기사를 다루었다.

신문의 입장과 관점을 나타내는 사실도 38건이나 되었다. 그러나 모든 신문의 사실이 부지 유치 신청, 과격시위, 현금보상, 등교거부, 주민투표, 군수폭행 등 상황과 사안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입장과 관점으로 사태를 평가하고 있었다. 즉,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과 정책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촉구하고, 지역주민과 단체에 대해서는 과격시위의 자제와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들어 수용자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는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존한 하거나, 시위소식 등을 전하는 단순기사였으며, 심층보도는 지역주민의 반응을 기사화 하거나 외국의 성공사례 소개, 전문가 인터뷰 기사였으나, 사업 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왜,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사는 없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와 시위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지만 반대논리를 펴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신문에서 이러한 여론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는 68건의 심층 보도 가운데 17건에서만 언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해설, 분석기사는 없고, 주민의 반응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한 내용 전달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신문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조화의 장을 이끌어 내거나 제공하지 못하였고,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많은 기사 보도의 남발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영향만 남았다고 판단된다.

신문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일차적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내용들 중에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가하는 메시지를 담아주어야 한다. 즉, 반대주민의 시위에 대한 단순보도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를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방폐장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위성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실어주지 못하여 입장이 다른 주체들 간에 대화와 공론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남준. 안면도사태 보도 분석. 상호설득적 환경정보교류 부재, 저널리즘 비평 12:13-19, 1994
- 소영진. 위험소통의 제도화 방안, 사회과학 39(2):27-63, 2000
- 이정춘.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보도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1996, 한국언론학회
-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보도동향. 통권 제133호-제135호, 2003